

2 정부 정책 동향 (6. 30~7. 6)

은행감독원(6. 30): '기업구조조정 세부 추진 방안'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대 그룹 계열사: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제출 요구 - 64대 그룹 계열사: 15일까지 8개 은행이 2개씩 퇴출 대상 계열사 선정
금감위(7. 1): 은행경영 건전성 기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무수익 여신 기준 강화 - 요주위 여신에 대해서는 2%의 대손충당금 적립 - 채권은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
공정거래위(7. 2):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열사간 빚보증을 서거나 경쟁을 가로막는 기업간 결합 행위 적발시 최고 88억까지 과징금 부과 -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,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제출 거부 여부, 법 위반 기간,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, 회사 규모 등을 과징금 부가기준으로 삼음
기획예산위(7. 3): '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'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철, 한국중공업, 한국종합기술금융, 한국종합화학, 국정교과서 등 5개 공기업과 21개 자회사 이달 중 매각 - 한국통신, 한국전력, 담배인삼공사, 가스공사, 대한송유관 공사,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기업 2002년까지 단계적 민영화 - 공기업 매각에는 국내 모든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
정부(7. 3): 비탈 촉진 특별 조치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탈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인수·매각 과정에서 부과되는 양도세, 취득세 등 세금 경감 조치 검토
당정회의(7. 4): 계정역할 강화 및 세제 조정 방안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적자 규모를 IMF와 합의한 7조 8,000억 원 보다 9조 7,000억 원 늘어난 17조 5,000억 원으로 확대 - 이자소득세율 24.2%로 인상 -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8 당 691원으로, 경유는 190원으로 각각 100원, 80원 인상
정부-세계 간담회(7. 4): 비탈 자율 추진 등 9개 항목 합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간 사업 교환(비탈)은 원칙적으로 기업 자율에 의해 추진되며 정부는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 - 정부와 세계의 경제 간담회 상설기구화 - 수출 확대, 재정수지 적자 4% 수준까지 확대 노력 등
재정부(7. 6): 특별소비세 10일부터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침체가 심한 내구소비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 30% 인하 - 10일부터 적용될 품목별 세율은 승용차 7~14%, 에어컨 21%, TV·냉장고·오디오 등 10.5%, 피아노 7% 등

(이 보 성 bslee@hri.co.kr ☎724-4035)